

‘최고위원 도전’ 민주 송갑석 의원

“호남의 정치력 복원해 달라”

“민주당이 호남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패배했다.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 달라” 11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갑석 의원은 “8명의 후보 중 비제프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전북 전남 광주가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호남의 정치가 빛날 수 있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어필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필요한 것 서류에 편승 하지 않은 호남정신” “초광역 경제프로젝트 추진” 어필

수도권 후보가 단 1명 송갑석뿐이다”며 “계파 없는 비수도권 후보이자 호남 단일후보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호남정신이다”며 “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호남의 정신이랄로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갔고 새롭게 합류한 당원들의 나이가 대개 비교적 젊기 때문에 젊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호남의 중요성의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북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 “먼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라는 전북자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호남의 RE300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호남 경제를 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송갑석 의원이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인천·부산·울산·경남을 거친 민주당 전당대회는 14일 대전·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호남의 RE300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호남 경제를 만

40%·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28%에 최종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로는 장경태·서영교·박찬대·고민정·고영인·윤영찬·정청래·송갑석 등 8명이 투표는 대의원 30%·권리당원 /김경수 기자

‘소주성’ 당 강령 삭제 추진에 “文 지우기” 반발

민주 윤영찬 의원 “실패하지 않아... 고용 늘고 분배 개선” “여당서 야당 됐다 당 정체성 달라질 수 없어” 강조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1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빼고 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고 분배도 개선됐다”며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소비 진작과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들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이동시킨 민주당다운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혁신인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반발했다.

또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당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다. 가치와 현실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가치는 곧 정체성”이라며 “정당의 정체성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혁신인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반발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혁신인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어 “체계적인 공문과 과정보도 없이, 의원 설문조사와 전준위 강령분과 회의만을 통해 찬반 거수로 공당이 나아가 갈 방향을 정한다면 민주당의 가치는 물론 우리를 지지해 준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집중호우 대비 긴급 의장단회의

수해 피해 예방·복구에 모든 역량 총동원 요청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의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농지 및 상가, 주택 피해가 잇따르자 군산시의회는 주민불편 파악 및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모든 시의원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며, 의장단에서는 긴급히 개최한 회의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피해 예방과 복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상 총 강수량이 약 100mm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장단에서는 산업단지 일원의 도로침수 현황을 신속히 해결할 것과 침수로 인해 혼잡한 신동동 수송동 내문동, 소룡동 일대에 대한 교통 통제를 당부했다. 또한 저지대 및 공사지역 주변의 토사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을 철저히 점검하여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침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오수관 공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토목공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재난은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 직원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현장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난 예방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단 출범... “尹정부 입장 모호 불안”

당장에 위성곤 의원... 규탄·철회 결의안 발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러한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등 전당적으로 나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방사 후 7개월이던 제주 앞바다에 퍼질 것”이라고 한다. 수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후쿠시마 폭발 당시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

린 바 있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고, 일본에 적극적 반대는커녕 상의 시도조차 안 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 특히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는 굴종 외교가 아니라 제소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후쿠시마 대응단을 중심으로 일본 오염수 방출 저지에 적극 대응과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응단 단장을 맡은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응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 목표를 갖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 단장에 따르면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 3명 의원이 참여했다. 여기에

는 ▲국회 차원의 일본 오염수 방출 규탄 ▲일본 정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주변국 등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출 규탄 및 저지 참여 유도 ▲일본 내 방출 반대 양심 세력과 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응단에 동참한 이원욱 의원은 “제가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책 촉구안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가서 강력 규탄 대책 촉구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핵종실버로 제거했다곤 하지만 삼중수소가 12년 좀 넘게 남는다고 한다. 일본 주장은 열흘이면 몸에서 빠져나가니 문제 없다는 것인데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제

바다 오염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생태, 하천까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건 도저히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사회식산중앙회장, 박영남 한국수산업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방출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 수산업 붕괴는 자명한 일이다. 이 사안은 우리 국가수위 안보가 위협받는 임중하고 중대한 문제다. 수산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